

고용불안의 실태와 원인

남 재 량*

I. 서 론

한국경제는 1990년대 들어서도 한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다. 1990~1997년의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7.5%에 달한다. 외환위기와 함께 1998년 GDP 성장률이 -6.9%로 급락하였으나 1999년 들어 성장률은 다시 9.5%로 회복된다.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은 5.4%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는 과거의 실적에 이르지 못하는 못 하지만 아주 저조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국민 대부분이 걱정하는 문제로 되었으며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외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고용불안이다. ‘고용불안’은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각종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에서 고용불안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고용불안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러한 고용불안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심각하며 고용불안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nam@kli.re.kr).

II. 고용불안의 정의

고용불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용불안’을 정의하는 것이다. 고용불안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이며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고용불안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정의하여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의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불안’에는 사람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개념인 ‘불안’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를 정의하기가 간단치 않다.

고용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 고용 불안정성(*instability*) 및 고용 불안전성(*insecurity*)을 들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이들 개념에도 차이가 있으나 직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 근로자가 일자리에 있는 기간의 변화, 사용자에 의한 일자리의 중단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들도 개발되어 있다. 직장유지율, 단기근속자 비율, 이직률, 해고율 등이 그러한 측면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용불안’이라는 용어에는 이러한 기존의 개념들과 달리 실직의 가능성이 보다 직접적이고 더욱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면 ‘고용불안’은 기존의 개념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실직을 보다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결국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용불안이라는 용어에는 무엇보다도 ‘실직의 두려움’이 핵심적이다. 현재의 고용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조만간 이 상태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면 고용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불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쉽게 다시 취업할 수 있다면 실직 가능성의 증대가 반드시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¹⁾ 따라서 우리는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1) 물론 이러한 재취업에는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없어야 할 것이다.

Ⅲ. 고용불안 정도의 측정

이제 앞에서 정의한 고용불안의 개념을 측정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여 보자.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은 모두 '가능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실직의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실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리고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에 해당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직 가능성은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취업에서 이탈할 가능성, 즉 취업 이탈확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취업 가능성 역시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부 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면 고용불안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고용불안을 측정하는 데에는 기존의 주요 노동시장 변수들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실업률을 위시한 대표적인 노동시장 변수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정태적 측면을 측정하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실직 가능성'과 '재취업 가능성'은 모두 동태적인 개념이다. 즉 '실직 가능성'은 취업상태에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가는 노동력 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의미한다. '재취업 가능성' 역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옮겨가는 동태적 변화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정태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데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로 고용불안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징들을 유량변수들(flow variables)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유량변수들을 한국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로 구축하면 여러 유량변수들의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량변수들을 측정하여 고용불안의 정도를 평가하기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로 구축하고 이웃한 시점에서 동일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관찰하면 취업자 가운데 실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곧 실직확률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패널자료를 사용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재)취업확률에 해당한다. <표 1>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실직확률과 재취업확률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직확률은 외환위기와 더불어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3년에 2.7이던 실직확률은 1994~1996년의 기간 동안 2.5의 값으로 매우 안

정되어 있으며 1997년에도 2.6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와 함께 4.3으로 급증한 후 이듬해에 4.0으로 하락하며 2000년에는 3.7로 하락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2001년의 3.6에서 2002년의 3.2로 그리고 2003년에는 3.6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1993~1997년에 평균 실직확률은 2.6이었으나 2000~2003년 동안에는 3.5로 높아졌다. 이는 과거에는 취업자 100명 가운데 월평균 2.6명이 실직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3.5명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 가능성으로 평가한 고용불안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음을 알려준다.

〈표 1〉 고용불안 : 실직 가능성과 재취업 가능성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1993-1996 | 2000-2003 |
|-------------|------|------|------|------|------|------|------|------|------|------|------|-----------|-----------|
| 실직확률(eu+en) | 2.7 | 2.5 | 2.5 | 2.5 | 2.6 | 4.3 | 4.0 | 3.7 | 3.6 | 3.2 | 3.6 | 2.6 | 3.5 |
| 실직확률1(eu) | 0.6 | 0.4 | 0.4 | 0.4 | 0.5 | 1.6 | 1.2 | 0.9 | 0.8 | 0.6 | 0.7 | 0.5 | 0.8 |
| 실직확률2(en) | 2.2 | 2.1 | 2.1 | 2.0 | 2.1 | 2.8 | 2.8 | 2.9 | 2.8 | 2.6 | 2.9 | 2.1 | 2.8 |
| 재취업확률1(ue) | 24.3 | 25.3 | 26.7 | 27.2 | 24.3 | 21.0 | 25.0 | 26.5 | 26.8 | 25.0 | 26.0 | 25.9 | 26.1 |
| 재취업확률2(ne) | 3.9 | 3.5 | 3.5 | 3.5 | 3.2 | 3.8 | 4.2 | 4.2 | 4.5 | 4.1 | 4.4 | 3.6 | 4.3 |

이제 고용불안의 또 다른 한 부분인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재취업확률에는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상태보다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인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ue)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직 가능성을 말할 때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이행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도 함께 고려하였으므로 재취업 가능성에서도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이행(ne)도 추가로 고려하기로 한다²⁾.

먼저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에 대해 살펴보자. <표 1>에서 보듯이 이 값은 1998년에 21.0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1993~1996년 동안 ue는 25.9의 값을 가지며 2000~2003년에는 26.1의 값을 가져 양자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으로 판단할 때 고용불안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옮겨갈 확률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1993년에 3.9로 높았던 ne는 1994~1996년 동안 3.5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1997년에 ne는 3.2

2) 노동시장 신규참가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재'취업확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로 하락하고 1998년에 3.8로 상승한 후 1999년에 다시 4.2로 상승하며 2000년 이후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ne는 1993~1996년의 3.6에서 2000~2003년의 4.3으로 0.7포인트만큼 상승하고 있다.

결국 재취업 가능성으로 평가한 고용불안의 정도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확률에는 변화가 없으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재취업확률이 높아졌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직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재취업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불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재취업 가능성에서 우리의 주된 고려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인데 이 확률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재취업 가능성에 변화가 없다고 보면 실직 가능성의 증대로 인해 고용불안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확률이 높아진 것을 재취업 가능성의 증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고용불안의 정도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취업 가능성보다는 실직 가능성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³⁾ 결국 고용불안의 정도는 1990년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고용불안 계층

노동시장 전체로 볼 때 고용불안의 정도가 더욱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집단의 고용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은 아닐까? 제4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직확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표 2>는 실직 가능성을 가장 대표적인 인적 특성들인 성과 연령 및 학력집단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남성의 실직확률은 1993~1996년의 1.7에서 2000~2003년의 2.6으로 상승한다. 여성의 경우도 동일기간 동안 3.8에서 4.8로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실직확률이 더욱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여성의 실직 가능성도 상당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실직 가능성의 증대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학력별로 보더라도 실직확률의 상승은 모든 집단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3) 본 연구가 정의한 고용불안의 개념은 이직률(job separation rate) 및 입직률(job finding rate)과 매우 유사하다. 실직확률은 이직률과, 재취업확률은 입직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실업률은 이직률과 입직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직률은 입직률보다 실업률에 훨씬 더 큰 효과를 갖는다.

〈표 2〉 노동력 집단별 실직확률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1993-1996 | 2000-2003 |
|------|------|------|------|------|------|------|------|------|------|------|------|------|-----------|-----------|
| 남 성 | 1.8 | 1.7 | 1.6 | 1.7 | 1.8 | 3.5 | 3.1 | 2.8 | 2.7 | 2.3 | 2.6 | 2.3 | 1.7 | 2.6 |
| 여 성 | 4.1 | 3.8 | 3.8 | 3.6 | 3.8 | 5.6 | 5.3 | 5.0 | 4.9 | 4.4 | 5.0 | 4.3 | 3.8 | 4.8 |
| 청 년 | 3.6 | 3.3 | 3.2 | 3.4 | 3.7 | 5.8 | 5.8 | 5.5 | 5.6 | 5.2 | 5.9 | 5.7 | 3.3 | 5.5 |
| 기 간 | 2.0 | 1.8 | 1.8 | 1.8 | 1.9 | 3.5 | 3.1 | 2.8 | 2.6 | 2.3 | 2.6 | 2.3 | 1.9 | 2.6 |
| 노 년 | 4.1 | 4.0 | 3.9 | 3.6 | 3.6 | 5.5 | 5.2 | 5.1 | 4.5 | 3.9 | 4.8 | 3.3 | 3.9 | 4.6 |
| 중졸이하 | 3.5 | 3.2 | 3.2 | 3.2 | 3.3 | 5.5 | 5.0 | 5.0 | 4.5 | 4.1 | 4.9 | 3.9 | 3.3 | 4.6 |
| 고 졸 | 2.6 | 2.4 | 2.4 | 2.4 | 2.7 | 4.6 | 4.3 | 3.9 | 3.9 | 3.5 | 4.0 | 3.6 | 2.5 | 3.8 |
| 전문대졸 | 1.7 | 1.7 | 1.7 | 1.7 | 1.6 | 3.2 | 3.0 | 2.7 | 2.5 | 2.3 | 2.6 | 2.5 | 1.7 | 2.5 |
| 대졸이상 | 4.1 | 3.8 | 3.8 | 3.6 | 3.8 | 5.6 | 5.3 | 5.0 | 4.9 | 4.4 | 5.0 | 4.3 | 3.8 | 4.8 |

한편 고용불안 계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근로자 집단이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불안이 비정규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근로의 정의와 측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임시·일용으로 구분한 근로를 비정규근로로 파악하기로 한다. <표 3>은 실직 가능성을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것이다.

이 표에서는 임금근로 종사자 집단의 실직확률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에 3.0, 1994~1996년에 2.7, 그리고 1997년에 2.9이던 실직확률이 1998년에 급증하여 5.0까지 상승한다. 1999년 실직확률은 4.6으로 하락하지만 이후 4.0 수준에서 부침하고 있을 뿐 과거의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실직확률은 1993~1996년의 2.8에서 2000~2003년의 4.0으로 크게 상승한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의 실직확률은 동일한 기간 동안 2.2에서 2.6으로 상승하는 데에 그친다. 즉 고용불안은 비임금근로보다는 임금근로에 집중되어 있다.

임금근로의 실직확률 상승을 초래한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자. 먼저 상용직의 실직확률은 1998년에 크게 상승하였다가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뿐 외환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상용직의 실직확률은 1993~1996년에 2.20이었으나 2000~2003년에는 2.15로 미세하게 하락하고 있다.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이러한 상용직 실직확률 하락은 기대취업기간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이들의 기대취업기간이 45.7개월에서 47.2개월로 길어진다.

임시직의 실직확률 역시 1998년에 11.2로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일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즉 이들의 실직확률은 1993~1996년에 8.1의 값을 가지며 2000~2003년에 7.8의 값을 가져 미세하

나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직의 취업기간이 12.5개월에서 13.1개월로 길어졌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이러한 변화와 달리 일용직의 실직확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크게 상승하고 있다. 즉 일용직의 실직확률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의 기간 동안 13.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높다. 즉 일용직 종사자 100명 가운데 다음 달에 실직하는 근로자가 13명을 넘는다는 뜻이다. 1993년에 이들의 실직확률은 14.7로 높으나 1996년의 12.7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1997년에 14.0으로 상승하며 1998년에 무려 23.8까지 상승한다. 즉 외환위기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 100명 중 23.8명이 그 다음 달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 1999년 들어 일용직의 실직확률은 18.9로 떨어지고 2000년에 다시 17.3으로 하락하지만 이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등락을 거듭한다. 이에 따라 일용직 실직확률은 1993~1996년에 13.4였으나 2000~2003년에 이르면 17.1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일용직의 취업기간은 7.5개월에서 5.9개월로 20% 이상 짧아진다.

〈표 3〉 종사상 지위별 실직확률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1993-1996 | 2000-2003 |
|-------|------|------|------|------|------|------|------|------|------|------|------|-----------|-----------|
| 임금근로 | 3.0 | 2.7 | 2.7 | 2.7 | 2.9 | 5.0 | 4.6 | 4.3 | 4.1 | 3.7 | 4.1 | 2.8 | 4.0 |
| 상용 | 2.5 | 2.0 | 2.2 | 2.2 | 2.4 | 3.5 | 2.2 | 2.2 | 2.3 | 1.7 | 2.4 | 2.20 | 2.15 |
| 임시 | 9.7 | 7.5 | 7.5 | 7.5 | 7.6 | 11.2 | 8.5 | 7.8 | 8.4 | 6.3 | 8.5 | 8.1 | 7.8 |
| 일용 | 14.7 | 13.0 | 13.2 | 12.7 | 14.0 | 23.8 | 18.9 | 17.3 | 17.8 | 14.1 | 19.2 | 13.4 | 17.1 |
| 비임금근로 | 2.3 | 2.3 | 2.2 | 2.1 | 2.1 | 3.3 | 3.0 | 2.8 | 2.7 | 2.3 | 2.7 | 2.2 | 2.6 |

V. 고용불안과 외환위기하의 신규 일용직

앞의 분석결과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핵심 집단이 일용근로자 집단임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상용직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닌 일용직에서 고용불안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용’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및 임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일용직 종사자 집단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어 이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는 지적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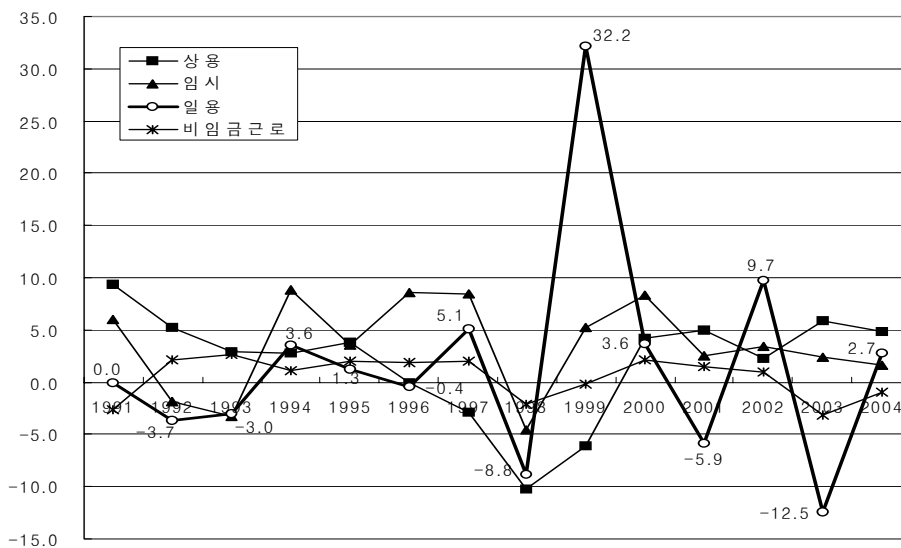
1. 일용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여 그 규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일용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고용불안 정도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전후한 시기의 고용성장률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일용직의 고용성장률은 흰 동그라미를 가진 굵은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다른 지위들의 성장률과 달리 이상치(outlier)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외환위기 하에서 경험하고 있다. 즉 1999년의 일용직 고용성장률은 무려 32.2%로서 다른 어떠한 종사상의 지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용직의 고용성장률은 1999년의 이러한 변화 이후 매우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1999년에 32.2%였던 일용근로의 고용성장률은 이듬해인 2000년에 3.6%로 급락하며 다른 모든 종사상 지위별 성장률이 정(+)의 값을 보이는 2001년에 혼자서 음(-)의 값을 보일 뿐 아니라 그 크기도 -5.9%나 된다.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일용직 고용성장률은 무려 9.7%로 높아 다른 지위들의 경우와 크게 구분된다. 더군다나 이듬해인 2003년에 일용근로의 성장률은 무려 -12.5%를 기록하여 1998년의 성장률인 -8.8%보다도 훨씬 더 저조하다. 그리고 2004년에는 2.7%로 성장률이 다시 양의 값으로 돌아선다.

[그림 1] 종사상 지위별 고용성장률



일용근로 종사자 고용성장률의 급증과 급격한 변동이 일용직에서의 고용불안 증대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일용근로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일용직 종사자수는 1998년 1월에 156만명이었으며 이후 단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1998년 12월에 이르면 195만명으로 39만명 증가한다. 그러나 1999년 1월에 170만명으로 25만명이나 감소하며 2월에도 173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그런데 3월에 이르면 일용근로 종사자수는 208만명으로 무려 35만명이나 증가한다. 4월에도 226만명으로 다시 18만명이 증가하며 5월에는 243만명으로 또 다시 17만명이나 증가한다. 이후부터는 대략 240만명의 규모에서 부침하고 있으며 12월에는 241만명을 기록한다. 즉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단 3개월 만에 일용근로자가 무려 70만명 정도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수의 변화는 매우 기록적이며 주목할 만하다. 결국 앞의 [그림 1]에서 보았던 32.2%라는 경이적인 1999년 일용직 고용성장률은 1999년 2월부터 5월 사이의 급격한 일용근로 증가에 의한 것이다.⁴⁾

<표 4> 월별 일용직 종사자수

(단위 : 천명)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1월 | 1,493 | 1,649 | 1,701 | 1,612 | 1,806 | 1,564 | 1,707 | 2,236 | 2,034 | 2,243 | 2,102 |
| 2월 | 1,461 | 1,597 | 1,640 | 1,542 | 1,674 | 1,431 | 1,736 | 2,220 | 1,949 | 2,293 | 2,035 |
| 3월 | 1,648 | 1,738 | 1,734 | 1,650 | 1,762 | 1,546 | 2,088 | 2,326 | 2,068 | 2,313 | 2,127 |
| 4월 | 1,702 | 1,822 | 1,830 | 1,744 | 1,868 | 1,619 | 2,264 | 2,423 | 2,206 | 2,465 | 2,168 |
| 5월 | 1,779 | 1,792 | 1,841 | 1,815 | 1,928 | 1,660 | 2,435 | 2,476 | 2,257 | 2,490 | 2,171 |
| 6월 | 1,807 | 1,833 | 1,844 | 1,826 | 1,950 | 1,706 | 2,408 | 2,425 | 2,277 | 2,523 | 2,193 |
| 7월 | 1,787 | 1,812 | 1,855 | 1,838 | 1,988 | 1,709 | 2,366 | 2,456 | 2,333 | 2,552 | 2,210 |
| 8월 | 1,749 | 1,817 | 1,825 | 1,807 | 1,954 | 1,661 | 2,343 | 2,284 | 2,221 | 2,372 | 2,041 |
| 9월 | 1,820 | 1,823 | 1,839 | 1,880 | 1,921 | 1,902 | 2,530 | 2,327 | 2,266 | 2,452 | 2,045 |
| 10월 | 1,819 | 1,854 | 1,856 | 1,907 | 1,954 | 1,926 | 2,462 | 2,405 | 2,297 | 2,503 | 2,104 |
| 11월 | 1,787 | 1,824 | 1,884 | 2,002 | 1,969 | 1,957 | 2,529 | 2,417 | 2,382 | 2,501 | 2,194 |
| 12월 | 1,764 | 1,786 | 1,772 | 1,910 | 1,860 | 1,954 | 2,413 | 2,294 | 2,331 | 2,489 | 2,166 |
| 2~5월 | 318 | 195 | 201 | 273 | 254 | 229 | 699 | 256 | 308 | 197 | 136 |
| 1~12월 | 271 | 137 | 71 | 298 | 54 | 390 | 706 | 58 | 297 | 246 | 64 |

그렇다면 1999년 2~5월에 일용직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느 곳에

4) 2~5월의 일용근로 증가는 계절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2~5월 동안 일용근로는 대부분 20만명 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20만명 남짓한 계절적인 변화의 세 배 이상을 웃도는 70만명에 이르는 1999년의 일용근로 급증을 단지 계절적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서 온 사람들일까? 이 기간 동안 일용직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후 노동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용직 고용불안 증대의 원인을 찾는 데 크게 한 걸음 다가설 수도 있다.

2. 일용직 신규종사자 70만명은 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곳으로 가는가?

이제 일용직으로 새로 진입한 사람들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표 5>는 이를 정리한 것으로 1999년 3월과 4월 그리고 5월에 일용직으로 새로 진입한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교를 위해 5년 전인 1994년 3~5월의 일용직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5> 3~5월 일용직 신규진입자의 이전 및 이후 노동력 상태별 이행자수와 이행확률

(단위: 천명, %)

| | | 1년전 | 6개월전 | 1개월전 | 현재 | 1개월후 | 6개월후 | 1년후 | 2년후 | 3년후 |
|------|------|-----------|-----------|-----------|--------------|-------------|-----------|-----------|-----------|-------------|
| 1999 | 상 용 | 66(3.3) | 41(2.1) | 31(1.6) | 0(0.0) | 8(0.4) | 36(1.8) | 55(2.8) | 65(3.3) | 72(3.6) |
| | 임 시 | 161(8.1) | 156(7.8) | 149(7.5) | 0(0.0) | 69(3.5) | 197(9.9) | 206(10.3) | 193(9.7) | 150(7.5) |
| | 일 용 | 293(14.7) | 435(21.9) | 0(0.0) | 1,992(100.0) | 1,405(70.5) | 809(40.6) | 569(28.6) | 330(16.5) | 259(13.0) |
| | 비임금 | 200(10.1) | 216(10.8) | 161(8.1) | 0(0.0) | 102(5.1) | 177(8.9) | 155(7.8) | 150(7.5) | 144(7.2) |
| | 실 업 | 173(8.7) | 205(10.3) | 605(30.4) | 0(0.0) | 144(7.2) | 116(5.8) | 84(4.2) | 51(2.5) | 23(1.2) |
| | 비경활 | 484(24.3) | 511(25.6) | 836(42.0) | 0(0.0) | 200(10.1) | 322(16.2) | 347(17.4) | 310(15.5) | 241(12.1) |
| | 실직확률 | - | - | - | - | (17.3) | (22.0) | (21.6) | (18.0) | (13.3) |
| | 표본이탈 | 615(30.9) | 428(21.5) | 210(10.5) | 0(0.0) | 64(3.2) | 335(16.8) | 577(28.9) | 895(44.9) | 1,102(55.3) |
| | 전 체 | 1,992 | 1,992 | 1,992 | 1,992 | 1,992 | 1,992 | 1,992 | 1,992 | 1,992 |
| 1994 | 상 용 | 33(3.0) | 33(3.1) | 29(2.7) | 0(0.0) | 8(0.8) | 24(2.2) | 26(2.4) | 36(3.3) | 34(3.1) |
| | 임 시 | 45(4.1) | 75(6.9) | 101(9.3) | 0(0.0) | 38(3.5) | 78(7.2) | 77(7.1) | 61(5.6) | 52(4.8) |
| | 일 용 | 202(18.6) | 265(24.4) | 0(0.0) | 1,086(100.0) | 798(73.5) | 449(41.3) | 360(33.2) | 211(19.4) | 163(15.0) |
| | 비임금 | 95(8.8) | 114(10.5) | 100(9.2) | 0(0.0) | 67(6.2) | 95(8.8) | 82(7.5) | 92(8.4) | 84(7.7) |
| | 실 업 | 16(1.5) | 21(1.9) | 96(8.9) | 0(0.0) | 8(0.8) | 18(1.6) | 12(1.1) | 9(0.8) | 10(0.9) |
| | 비경활 | 259(23.8) | 262(24.1) | 555(51.1) | 0(0.0) | 90(8.2) | 192(17.7) | 199(18.3) | 177(16.3) | 137(12.6) |
| | 실직확률 | - | - | - | - | (9.0) | (19.3) | (19.4) | (17.1) | (13.5) |
| | 표본이탈 | 436(40.1) | 316(29.0) | 204(18.8) | 0(0.0) | 77(7.1) | 230(21.2) | 331(30.5) | 502(46.2) | 607(55.9) |
| | 전 체 | 1,086 | 1,086 | 1,086 | 1,086 | 1,086 | 1,086 | 1,086 | 1,086 | 1,086 |

1999년 3월에 일용직으로 신규진입한 근로자는 무려 76.8만명이나 되며 4월에는 64.6만명, 그리고 5월에는 57.9만명이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신규진입한 근로자는 199.2만명이다. 1994년 3~5월의 일용직 신규진입자도 108.6만명으로 상당한 규모이나 1999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1999년 3~5월 일용직 신규진입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 5>의 괄호 속 값에서 보다 정확히 볼 수 있다. 괄호 속의 값들은 각 칸에 있는 근로자수를 일용직 신규진입자 총수인 199.2로 나눈 것이다. 물론 1994년에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괄호 안의 값들은 3~5월 일용직 신규진입자를 100명이라고 하였을 때 이들의 이전(1개월, 6개월, 1년)과 이후(1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노동력 상태에 과연 몇 명이 있었으며, 있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일용직으로 새로 들어온 근로자들이 이전에 처해 있었던 노동력 상태는 주로 비경제활동상태이다. 즉 1999년의 경우 일용직 신규진입자 100명 가운데 42.0명이 1개월 전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으며 6개월 전에는 25.6명이, 그리고 1년 전에는 24.3명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던 것임을 1994년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1994년에도 3~5월의 일용직 신규진입자 100명 가운데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던 사람은 1개월 전에는 무려 51.1명이고 6개월 전에는 24.1명이며 1년 전에는 23.8명이었다. 따라서 일용직 신규진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 옮겨온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1999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1개월 전 노동력 상태를 보면 1994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두드러진 모습은 실업상태에서 관찰된다. 일용직 신규진입자의 이전 노동력 상태가 실업인 경우는 1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으로 볼 때 1999년은 각각 30.4명, 10.3명, 8.7명으로 많다. 이는 1994년의 8.9명, 1.9명, 1.5명과 크게 대비된다. 다른 노동력 상태들에서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기 어렵다. 이는 1999년 3~5월 일용직 신규진입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업상태에서 이행하여 왔음을 알려준다. 1개월 전에 실업에 있다가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실제로 60.5만명이고 6개월 전에 실업에 처해 있었던 사람은 20.5만명이며 1년 전에 실업이었던 사람도 17.3만명이나 된다.

이제 일용직으로 진입한 사람들의 이후 노동력 상태를 추적 관찰하여 일용직 신규진입자들이 이후 노동시장에서 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표 5>에서 보듯이 구분되는 특징은 임시직 및 실업으로 이행확률에서 나타난다. 먼저 임시직으로 이행확률을 보면 1개월 후 이행률은 1999년과 1994년 모두 3.5로서 차이가 없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6개월 후의 임시직 이행률은 1999년에서 9.9로서 1994년의 7.2보다 2.7포인트 더 크며 1년 후의 경우에도 10.3으로서 1994년의 7.1보다 3.2포인트 더 크다. 2년이 경과하더라도 1999년의 이행률은 9.7로서 1994년의 5.6보다 4.1포인트 더 크다. 3년 후의 경우는 표본이탈이 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실업으로 옮겨갈 확률은 임시직으로 이행확률보다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즉 1개월

후의 이행률은 1999년과 1994년에서 각각 7.2와 0.8로서 크게 다르며 6개월 후에도 5.8과 1.6으로 차이가 크고 1년 후에도 4.2와 1.1로 상당히 다르다. 2년 후에는 2.5와 0.8로서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나 여전히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실직확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개월 후 실직확률은 1999년 3~5월 진입자의 경우 17.3으로서 1994년의 9.0에 비해 매우 높으며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에도 여전히 더 높다.

결국 1999년 3~5월 일용직 신규진입자는 주로 실업상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며 외환위기하에서 실업상태에 처해 있던 근로자들이라는 점이 다른 시기의 일용직 신규진입자와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임시직으로 이행하기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취업과 실직을 주로 경험함으로써 일용근로의 고용불안을 높게 된 것이다.

3. 이들은 어떻게 일용직으로 종사하게 되었는가?

근로자가 종사하던 업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인적특성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볼 수 없었던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먼저 일용직 신규진입자들 가운데 몇 명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알아보자. <표 6>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건설업에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다. 월별과 연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신규진입자들 가운데 100~220만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으로 취업하고 있다.

<표 6>을 보면 우리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이하 공공행정업)에서 매우 급격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1997년에는 3월과 4월에 6천명이, 5월에는 단 1천명만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98년에도 1.1만명과 4천명, 그리고 2.3만명이 종사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1999년에 이르러 3월에 일용직으로 신규진입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15.5만명이 공공행정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0.4만명과 6.9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이 업종에서 일용근로로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는 모두 32.8만명에 달한다.⁵⁾

우리는 앞에서 일용직 신규진입 근로자들을 추적 관찰하여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서 옮겨왔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오는 사람들이 주로 공공행정업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외환위기하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던 실업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근로 정책이다. 당시 공공근로를 통해 흡수한 실업자는 1999년 한 해 동안 자치단체 공공근로

5) 1999년에 제조업으로 진입하는 일용근로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표 7>에서 보듯이 제조업 진입자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사업에서 총 99.5만명,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에서 총 52만명에 이른다.⁶⁾ 특히 공공근로 사업은 1999년 상반기 중에 집중 실시되었다.

이렇게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업종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실시한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공행정업으로 포착된다. 따라서 1999년 3~5월에 일용직으로 신규진입한 사람들은 외환위기 당시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들로써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라 취업한 사람들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일당을 받고 고용되므로 종사상의 지위가 일용직으로 분류된다.

<표 6> 일용직 신규진입자의 업종별 종사자수

(단위 : 천명)

| | 1997 | | | 1998 | | | 1999 | | |
|--------------------|------|-----|-----|------|-----|-----|------|-----|-----|
| | 3월 | 4월 | 5월 | 3월 | 4월 | 5월 | 3월 | 4월 | 5월 |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38 | 38 | 33 | 30 | 40 | 55 | 48 | 51 | 52 |
| 어업 | 0 | 0 | 0 | 3 | 1 | 0 | 4 | 3 | 4 |
| 광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제조업 | 68 | 66 | 57 | 80 | 56 | 51 | 133 | 105 | 102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 | 0 | 0 | 0 | 0 | 0 | 0 | 0 | 1 |
| 건설업 | 218 | 171 | 117 | 186 | 153 | 131 | 205 | 172 | 148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46 | 38 | 47 | 49 | 40 | 41 | 52 | 54 | 67 |
| 숙박 및 음식점업 | 54 | 53 | 33 | 62 | 61 | 43 | 79 | 73 | 66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8 | 7 | 8 | 5 | 6 | 6 | 6 | 11 | 16 |
| 금융 및 보험업 | 6 | 2 | 1 | 7 | 6 | 3 | 9 | 6 | 9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14 | 9 | 7 | 22 | 10 | 13 | 20 | 23 | 13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6 | 6 | 1 | 11 | 4 | 23 | 155 | 104 | 69 |
| 교육서비스업 | 3 | 3 | 3 | 7 | 4 | 3 | 14 | 13 | 10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 | 2 | 0 | 1 | 2 | 1 | 2 | 3 | 1 |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9 | 10 | 10 | 12 | 7 | 12 | 25 | 18 | 12 |
| 가사 서비스업 | 14 | 13 | 8 | 20 | 10 | 10 | 14 | 9 | 10 |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0 | 1 | 0 | 0 | 0 | 0 | 0 | 0 | 0 |
| 전체 | 487 | 418 | 325 | 496 | 402 | 394 | 768 | 646 | 579 |

<표 7>을 보면 분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건설업과 공공행정업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건설업은 가장 비중이 높은 업종인데 1997년에 비해 1999년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고 있다. 즉 1997년 3월의 경우 건설업의 비율은 44.8%였으나 1999년 3월에는 26.7%로 18.1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14.2포인트와 10.4포인트의 차이가 생겨났다.

건설업의 비중 감소는 공공행정업의 비중 증가에 의해 거의 충당되고 있다. 즉 1999

6) 노동부, 『'99 노동백서』, 74~75쪽.

년은 1997년에 비해 공공행정업의 비중이 3월에만 18.8포인트 높아졌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14.7포인트와 11.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으로 인해 공공행정업 종사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이에 따라 건설업의 비중이 상응하는 정도로 감소하였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이제 일용직 신규진입자의 업종분포를 기존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표 7>에서 보듯이 1999년 당시 일용직에 이미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비해 새로 일용직으로 취업한 근로자들은 공공행정업에 집중되어 있다. 즉 신규진입자가 이 업종에 취업하는 비율은 3월에 20.1%로서 기존의 일용직 종사자의 11.8%에 비해 무려 8.4포인트 더 높다. 4월에도 5.0포인트 더 크다. 다만 5월에는 -0.5포인트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용직으로 신규진입한 근로자들이 다음 달에도 일용직에 머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작아지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일용직 종사자와 비교하더라도 공공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표 7> 일용직 신규진입자 및 기존 일용직 종사자의 업종 분포

(단위: %)

| 구 분 | 1997년 일용직 | | | 1999년 일용직 | | | | | |
|--------------------|------------|-------|-------|------------|-------|-------|-------------|-------|-------|
| | 신규진입자 업종분포 | | | 신규진입자 업종분포 | | | 기존 종사자 업종분포 | | |
| | 3월 | 4월 | 5월 | 3월 | 4월 | 5월 | 3월 | 4월 | 5월 |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7.9 | 9.0 | 10.1 | 6.3 | 7.9 | 9.0 | 3.4 | 5.4 | 5.9 |
| 어업 | 0.0 | 0.0 | 0.0 | 0.6 | 0.5 | 0.7 | 1.1 | 1.0 | 0.8 |
| 광업 | 0.0 | 0.1 | 0.0 | 0.0 | 0.1 | 0.1 | 0.0 | 0.0 | 0.0 |
| 제조업 | 14.0 | 15.8 | 17.6 | 17.3 | 16.2 | 17.6 | 20.6 | 20.5 | 19.8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0.2 | 0.0 | 0.0 | 0.0 | 0.0 | 0.2 | 0.2 | 0.2 | 0.2 |
| 건설업 | 44.8 | 40.9 | 35.9 | 26.7 | 26.7 | 25.5 | 24.8 | 26.3 | 26.4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9.4 | 9.1 | 14.6 | 6.7 | 8.3 | 11.5 | 9.8 | 8.6 | 8.7 |
| 숙박 및 음식점업 | 11.1 | 12.6 | 10.0 | 10.4 | 11.3 | 11.4 | 13.5 | 12.9 | 12.1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7 | 1.6 | 2.3 | 0.7 | 1.6 | 2.7 | 2.4 | 1.7 | 2.0 |
| 금융 및 보험업 | 1.2 | 0.6 | 0.4 | 1.2 | 1.0 | 1.6 | 1.1 | 1.3 | 1.2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2.9 | 2.2 | 2.2 | 2.6 | 3.6 | 2.3 | 3.1 | 3.1 | 3.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1.3 | 1.3 | 0.2 | 20.1 | 16.1 | 11.9 | 11.8 | 11.1 | 12.4 |
| 교육서비스업 | 0.5 | 0.7 | 0.9 | 1.9 | 2.1 | 1.7 | 0.9 | 1.2 | 1.3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0.2 | 0.4 | 0.1 | 0.3 | 0.5 | 0.2 | 0.3 | 0.4 | 0.5 |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1.9 | 2.4 | 3.1 | 3.3 | 2.8 | 2.0 | 3.4 | 3.5 | 3.1 |
| 가사 서비스업 | 2.9 | 3.1 | 2.5 | 1.9 | 1.4 | 1.7 | 3.4 | 2.8 | 2.5 |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0.0 | 0.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VI. 일용직 신규진입자의 노동시장 성과

그렇다면 고용불안의 증대를 초래한 일용직 신규진입자들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는 어떠하며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나 될까? 또 외환위기하에서 실직상태에 처하기 전에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주로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왜 실직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임금과 가구소득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며 1998년 이전의 노동력 상태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조사는 개개인의 임금과 소득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본개편으로 인해 1998년 이전의 상태에 대한 추적은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KLIPS는 1998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나 이전의 직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임금과 소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은 KLIPS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일용직 신규진입자 집단을 비롯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도록 하자. 즉 1999년에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1998년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 ‘신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1998년에도 여전히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던 ‘기존 일용직’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1999년에 상용 및 임시직에 종사하던 사람들⁷⁾ 및 비임금근로 종사자들의 성과와도 비교하기로 한다.

<표 8>과 <표 9>는 1999년에 일용직에 새로 들어온 신규 일용직 종사자의 2000년 및 2001년의 경제활동상태를 각각 이행확률로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표 8>에 있는 2000년으로 이행을 살펴보면 신규 일용직의 실업확률은 5.8로서 기존 일용직의 0.6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상용·임시직의 2.1이나 비임금근로의 1.0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확률 역시 신규 일용직의 경우가 14.5로서 기존 일용직의 11.1에 비해 매우 높고 상용·임시직이나 비임금근로의 경우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이로 인해 신규 일용직의 실직확률은 20.3으로서 기존 일용직의 11.7이나 상용·

7) KLIPS에서 상용직과 임시직의 구분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들 두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고려하였다.

임시직의 12.2, 비임금근로의 9.7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는 그 정도는 다소 약화되지만 2001년으로 이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을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일용직 신규진입자들이 고용불안의 핵심 집단임을 알려주는 결과로서 앞의 분석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다만 여기의 분석은 상용직과 임시직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앞 장에서 보았던 임시직으로 이행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비임금근로로의 이행확률이 기존 일용직이나 상용·임시직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즉 신규 일용직의 비임금근로로의 이행확률은 2000년의 경우 10.1로서 기존 일용직의 1.2에 비해 매우 높고 2001년에서도 16.2로 기존 일용직의 4.9에 비해 매우 높다.⁸⁾

<표 8> 종사상 지위별 이행확률 :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이행

(단위: %)

| | 상용· 임시직 | 일용직 | 비임금 근로 | 실업 | 비경활 | 실직확률 (실업+비경활) | 전체 |
|--------|------------|------|-----------|-----|------|------------------|-------|
| 신규 일용직 | 8.7 | 60.9 | 10.1 | 5.8 | 14.5 | 20.3 | 100.0 |
| 기존 일용직 | 11.1 | 76.0 | 1.2 | 0.6 | 11.1 | 11.7 | 100.0 |
| 상용·임시직 | 83.9 | 1.2 | 2.7 | 2.1 | 10.1 | 12.2 | 100.0 |
| 비임금근로 | 4.5 | 4.8 | 81.0 | 1.0 | 8.7 | 9.7 | 100.0 |

<표 9> 종사상 지위별 이행확률 : 1999년에서 2001년으로 이행

(단위: %)

| | 상용· 임시직 | 일용직 | 비임금 근로 | 실업 | 비경활 | 실직확률 (실업+비경활) | 전체 |
|--------|------------|------|-----------|-----|------|------------------|-------|
| 신규 일용직 | 16.2 | 48.5 | 16.2 | 2.9 | 16.2 | 19.1 | 100.0 |
| 기존 일용직 | 18.2 | 61.8 | 4.9 | 1.8 | 13.3 | 15.1 | 100.0 |
| 상용·임시직 | 78.6 | 1.9 | 4.1 | 2.2 | 13.2 | 15.4 | 100.0 |
| 비임금근로 | 8.0 | 4.5 | 74.9 | 0.9 | 11.7 | 12.6 | 100.0 |

이제 신규 일용직 종사자들의 동시장 성과를 이들의 임금을 통해 살펴보고 아울러 가구소득도 살펴보자. <표 10>과와 <표 11>은 이를 잘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10>에서 신규 일용직의 임금을 다른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자. 이 표에서 보듯이 신규 일용직 종사자의 1999년 월평균 임금은 60.7만원으로서 기존 일용직 종사자들의 74.3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상용·임시직의 107.6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8) 이후의 연도로의 이행에 있어서는 관측수가 적어 해당자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규 일용직의 임금은 2000년에 83만원에 이르러 기존 일용직의 86.4만원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용·임시직의 120.1만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01년에 이르면 신규 일용직의 임금은 100.3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일용직 임금 97.0만원보다 약간 더 많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신규 일용직의 임금은 기존 일용직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임금수준으로 볼 때 1999년에 새로 일용직으로 진입한 근로자들이 1년 후부터는 기존의 일용직 종사자와 유사한 성과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제 신규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인지를 1인당 가구소득으로 살펴보자. <표 11>에서 보듯이 가구원 1인당 연간 가구 총소득은 신규 일용직 근로자 집단에서 가장 낮다. 신규 일용직 근로자들은 1998년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므로 1인당 가구소득이 연간 296.9만원으로서 월평균 2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9년에도 이들의 1인당 가구소득은 261.2만원에 불과하며 2000년에 이르러야 464.7만원으로 기존 일용직에 근접한다. 2001년에는 기존 일용직 종사자들보다 약간 더 많은 1인당 가구소득을 실현하나 2002년과 2003년에는 기존 일용직의 가구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즉 1인당 가구소득으로 볼 때 신규 일용직 종사자들은 기존 일용직 종사자들의 성과에 접근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0> 신규 일용직과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 | 신규 일용직 | 기존 일용직 | 상용·임시직 | 비임금근로 |
|------|--------|--------|--------|-------|
| 1998 | - | 73.3 | 118.9 | 102.7 |
| 1999 | 60.7 | 74.3 | 107.6 | 58.7 |
| 2000 | 83.0 | 86.4 | 120.1 | 78.6 |
| 2001 | 100.3 | 97.0 | 134.7 | 103.2 |
| 2002 | 105.7 | 113.2 | 149.9 | 109.5 |
| 2003 | 112.2 | 113.3 | 169.4 | 120.4 |

<표 11> 신규 일용직과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1인당 연간 총소득

(단위 : 만원)

| | 신규 일용직 | 기존 일용직 | 상용·임시직 | 비임금근로 |
|------|--------|--------|--------|-------|
| 1998 | 296.9 | 380.0 | 566.5 | 513.3 |
| 1999 | 261.2 | 400.0 | 621.8 | 521.7 |
| 2000 | 464.7 | 488.2 | 689.5 | 577.4 |
| 2001 | 445.0 | 441.7 | 734.6 | 576.3 |
| 2002 | 609.4 | 644.5 | 871.2 | 776.3 |
| 2003 | 622.4 | 670.6 | 972.3 | 770.0 |

결국 임금과 가구소득으로 볼 때 신규 일용직 진입자의 노동시장 성과는 기존 일용직 종사자들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상태로 평가한 노동시장 성과에서는 신규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직확률이 기존 일용직 종사자들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수준과 1인당 가구소득뿐 아니라 노동력 상태까지 추가로 고려할 경우 신규 일용직의 노동시장 성과는 기존 일용직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⁹⁾

VII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고용불안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고용불안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용불안’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고용 불안정성이나 고용 불안전성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용불안이라는 개념에는 실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의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직의 두려움’을 실직확률로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을 재취업 확률로 구체화하여 고용불안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최근 노동시장에서 실직 가능성이 높아져 고용불안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성이나 연령, 학력 등으로 구분한 집단들 가운데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집단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로 구분하여 보면 상용직이나 임시직에서는 실직확률이 높아지지 않은 반면, 일용직에서 실직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용직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다. 즉 고용불안은 상용직이나 임시직의 문제가 아니라 일용직 종사자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재취업확률에는 별 변화가 없지만 재취업 가능성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불안을 높이는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경우 상용직으로

9) 아울러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신규 일용직 종사자들이 1998년에 실업상태에 처하기 전의 가장 최근에 종사하던 지위는 주로 비정규직(58.7%)이었으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85.7%)가 압도적이었다. 비자발적 이직의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직장의 파산이나 휴·폐업인 경우가 33.3%였고 해고나 정리해고의 경우가 16.7%였으며 일이 끝나거나 일감이 없어서인 경우가 22.2%였다.

옮겨갈 확률은 크게 하락하고 일용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재취업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 불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한다.

상용직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닌 일용직에서 고용불안이 높아지게 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 실시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실업에 처해 있던 근로자들이 1999년 상반기에 실시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용직으로 진입하였고 이들이 이후에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남아 일용근로와 실업을 반복함에 따라 일용직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들 일용직 신규진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기존의 일용직 종사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금수준과 가구소득으로 보면 일용직으로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용직의 고용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의 고용불안을 초래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랜기간이 걸리더라도 밝혀지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 여러 대립되는 가설들이 병존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의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일용근로에 대한 수급 불일치가 일용직 고용불안의 근본 원인인 경우이다. 일용근로를 하려는 근로자는 많으나 일용직에 대한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등의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외환위기하에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일용직의 형태로라도 일하고자 하므로 일용근로의 공급 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의 해결책은 일용근로로 노동을 공급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임금을 통한 가격조정보다는 고용량을 통한 수량조정으로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과 변화를 주로 흡수하여 왔다. 상용직 사용시 고용조정의 어려움 및 연공급에 의한 비탄력적인 임금체계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상용직 사용을 꺼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환위기라는 충격은 이후의 노동시장에서 일용근로라는 완충을 통해 흡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고용불안의 문제가 일용직의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상용직의 임금유연화가 일용직의 고용불안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고용조정이 어렵더라도 임금이 유연하다면 기업들은 상용직의 사용을 덜 꺼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일용직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상태로 옮겨갈 여지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유연성을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

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서비스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직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고용안정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정센터들도 보다 풍부하고 양질의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고용보험사업 가운데 실업급여의 지급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층상담이나 진로지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